

≡ 2017. 02. 06 ~ 02. 10 ≡

금 당 면 자 체 감 사 결 과



완 도 군

(기 획 예 산 실)

주요 지적사항

① 관용차량 정비 및 수리기록 소홀

- 2015.4월부터 2016.12월말까지 6회 걸쳐 5,255천원을 차량정비(검사) 및 수리를 하였음에도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품 구입 및 수리대장을 작성 비치 관리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 소홀

② 당직근무(청사경비) 소홀

- 완도군당직근무규정에 의하면 당직은 재택당직을 포함하여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읍면장은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퇴청시 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그 후 청바 방법, 화재발생 등을 감지함으로써 당직근무자가 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28회 작동하지 않고 퇴청함으로써 청사경비 공백을 초래하는 등 당직 근무 소홀

③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부적정

- 청사안전관리와 보안관리를 위해 경비업 및 전기통신사업등으로 등록된 업체와 1년간 청사경비용역을 체결하고 경비용역료를 집행하여나 하나 용역계약 체결없이 경비용역료 집행 부적정

④ 방역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 보건의료원에서 일상경비로 전도된 방역사업요원 급식비를 836천원을 집행하면서 근무시간외 근무한 내역(초과근무확인대장 등)증빙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는데 관행적으로 예산집행 부적정.

⑤ 분뇨부속탱크 청소비 협정서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로 예산편성 및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용역계약에 의거 집행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집행할 뿐 아니라 금액이 3,000천원인데도 불구하고 협정서, 각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량과 규모, 수거차량 톤수 등을 협정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자체서식 계약서로 대체 하면서 집행 부적정

⑥ 사무인수 인계에 관한 업무처리 소홀

- 완도군사무인계인수인수 규칙에는 업무담당주사(6급)이상의 직위에 있는자는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와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정확한 업무과락을 위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있음에도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지 않음.

⑦ 세출예산 통계목 부적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정수기 렌탈료, 복사용지 구입, 청사관리 소독약품구입비를 공공운영비,시설부대비, 재료비에서 집행하였고,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이장회의 업무추진 운영비(급량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음.

⑧ 업무추진비(기관·부서·정원가산)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며, 또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원인 접대용으로 집행하였고, 건당 50만원이상 집행시 매월1회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사용내역 11건을 공개하지 않는등 집행 소홀.

9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에 따르면 8시 이전 조기 출근자 및 7시 이후 야간 퇴근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에 각각 출근 또는 퇴근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연근무제를 하는 공무원이 총 33회에 걸쳐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 해제를 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10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는 이장이 매월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장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참석수당 지급하는 등 집행 부적정

11 기간제근로자 보험(산재·고용)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자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는 일용근로자로 적용제외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부임의 5건 19,687천원 및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인부임 3건 56,975천원에 대한 사업들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산재·고용)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여 보험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12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절차 업무 소홀

-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업무 소홀

13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에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군수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당면에서는 전입신고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 주민 등록신고 이장 확인서를 신고서에 미편철함으로써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및 이장에게 교부된 확인서의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업무 추진 소홀.

14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에 관한 사항

- 가설건축물 취득한 후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 누락분 7건 949천원 및 재산세 과세 누락분 6건 46,390원 추정.

15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소홀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중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상차할 때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출장복명서 등 관련서류가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으며, 집행시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쓰레기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량일시와 운반차량의 승선일시, 운행횟수를 정확하게 살펴야 함에도, 차량승선권이 없이 사업자의 제출서류에만 의존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수거운반 과정 확인 소홀.

16 수산직불제 공동기금 추진 및 사후관리 소홀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활성화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어가 유지를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4~2015년 10개 어촌계에 공동기금 보조금을 36,750천원 지급하였으나 마을어촌계에서는 5,879천원 밖에 지출하지 않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저조하게 추진 및 소홀 관리

17 매입물품 장부 미등재 등 물품관리 소홀

- 완도군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매한 마대 등은 품종구분기준에 따라 소모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모품대장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2016년 4회에 걸쳐 10,184천원의 예산으로 마대 등 15,628매를 구입하고도 물품수불대장 또는 소모품대장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물품의 용도상 사업담당부서에서 총무담당으로 구매 요청함에도 전반적으로 총무담당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물품관리 구매 및 관리에 소홀

18 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에 한하여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승낙사항에 간이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비 지원에 따른 12,015천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 누락 및 견적서 도장과 지출결의서상의 도장 상이 등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상의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할 곳에 지출원이 날인되어 있고 주관과 취급자가 주문·납품·검수·물품출납부기재에 날인하여야하나 사업자가 납품에 날인되어 있는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

1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 소홀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기금 관리 및 점검을 위해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상태를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2017년 10개마을 전체가 개인통장으로 기금 운영 및 집행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차후 분재의 소지를 방지하여나 하나 이를 확인·점검하지 않아 일부 증빙서류없이 사용하는 등 기금 관리 소홀

20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점검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관리를 하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수시 현장확인 및 급여가 수급권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서류에 간이영수증이 첨부 되는 등 급여관리를 소홀

21 해양수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2016년에 설치된 해양수산물시설 21개소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점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확인결과 미점검 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2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관리하면서 2015.4.~2016.12. 기간중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강수량 기준 10mm 이상)28일간 야외근무가 불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소양교육 등 실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

23 내·해수면 어·패류양식 실태조사 업무 소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해수면 어·패류 등 양식어업에 대한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을 조사하고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재해에 대비하여 읍·면에 비치된 양식장관리 대장에 입식·출하시 양식 어업인 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면양식 어장 관리대장에 실태조사 결과를 미기입하여 양식어장 및 개인별 사육상황 기록관리 업무 소홀

24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 즉시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계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방문하여 농기계 활용여부 및 관리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농기계 구입시 현황만 관리하고 있을뿐 농기계 관리대장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25 시설공사 감독·검사 공무원 임명 추진 소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복지회관 방수공사 등 공사내용이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므로 시설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행정직 공무원을 부적절하게 공사 감독·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감독 소홀로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우려 및 현장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결과 초래

26 공사계약 분리발주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울포 공동창고 증축공사 외 8건의 사업을 분리발주하여 예산 낭비 초래

27 건설공사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미한 공사(공사금액 1천5백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당 울포 공동창고 증축공사 외 1건은 사업비 1천5백만원 이상이므로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며, 공동창고 증축공사 이므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28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등산로 정비사업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산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 소홀

29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 34건, 2016년도 36건 등 총 70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업무 소홀

30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숙원사업인 배수로정비공사의 5건에 대해 공사감독 및 정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4,550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31 민간자본 보조사업 물품구매 부적정

- 물품구입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와 2개 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 및 물품단가에 대한 비교 확인 조차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물품구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